

社說

일상 회복 속 가파르게 치솟는 먹거리·생활물가

물가가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코로나19 엔데믹에 따라 늘어난 야외활동의 영향으로 식품과 의류 가격의 오름세도 두드러졌다. 하향 안정을 이어갈 것인 당국의 예측과 괴리되는 모습이다. 의식주는 삶의 기본 요소다. 먹고 입는 대부분의 품목에서 고물가 여파가 여전해 가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

통계청 동향에 따르면 5월 광주지역 라면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13.0% 뛰었다. 글로벌 금융 위기를 겪던 2008년 4월과 지난해 3월(13.1%)에 이어 최대 상승률이다. 대표적인 서민 식료품 라면과 함께 초콜릿(27.9%), 치즈(25.8%), 커피(14.4%), 빵(12.6%), 삼계탕(12.3%), 피자(12.2%), 스낵과자(10.6%) 등 먹거리 지표인 가공식품과 외식 부문 세부 품목 112개 가운데 37개가 10%를 웃돌았다. 지난해 소비자물가지수가 3.3% 오르는데 그쳐 2021년 10월(3.2%) 이후 19개월 만에 최저였던 것과 대조적이다.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 역시 1년 전과 비해 매출 상위 10개 품목이 평균 5.4% 상승했다. 한국도

로공사 자료에 따르면 라면 121%를 필두로 호두과자 85%, 돈가스 82%, 어묵우동 5.6% 등을 기록했다. 의류 및 신발도 지난해 같은 달 대비 8.1% 올랐다. 1982년 5월(9.3%) 이후 31년 만에 가장 높다. 지난해 4월 1.4%에서 9월 3%로 도약했으며 1년 남짓한 사이 5배 이상으로 확대됐다. 이외에도 주택·수도·전기·연료(7.8%), 음식·숙박(6.6%), 기타 상품·서비스(6.5%), 가정용품·가사 서비스(6.8%), 오락·문화(4.6%) 등에서 상승을 지속하고 있다.

전체 소비자물가 완화에도 불구하고 피부적으로 느끼는 체감 물가는 치솟고 있다. 꺾임 기미가 없다. 소비자들은 안정되고 있다는 발표를 믿지 못하고 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3%대 이하로 하락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5개국이라는 조사도 의아스럽다. 실생활에서 민감한 먹거리와 생활물가의 고배가 풀렸다. 서민 살림살이는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 당국은 엄중하게 인식해야 한다. 강장을 놓지 말고 더 철저하게 관리해야 하겠다.

전라도 정체성 확립 남도의병 선양사업에 만전을

이순신 장군 관련 문서에서 출신지를 알 수 있는 인물 1천명 가운데 절반이 전라도 사람이고, 일제강점기 직전 1909년에는 교전 의병 1만7천579명 중 45.5%가 전남 의병으로 알려졌다. '남도 의병 선양재단'이 첫 회의를 열었다. 숨은 의병장 및 유적지 기초 조사와 문중 및 개인 소장 유물 신규 발굴, 박물관 건립 홍보, 지역 내 전파 활동을 맡는다.

자문단에서 조사한 내용은 전남도와 광주전남연구원 전문가 검토를 거쳐 전시 콘텐츠로 확정된다. 앞서 개최된 토론회에서는 '독일 유대인박물관'처럼 건립 이유 등 방문객에게 무엇을 전할 것인지 확실한 메시지의 중요성이 부각됐다. 의병장 일대기와 주요 전투의 연구를 통해 핵심 스토리를 구성하고, 점점 사라지는 유적지와 유물들의 기록화 및 시설 개선도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남도의병역사박물관은 200만 도민의 염원을 담아 추진되고 있다. 영산강이 인접한 나주시 공산면 신곡리 일원에 연면적 6천884㎡ 규모로 총사업비 440억원을 투입, 2025년 6월1일 '의병의 날' 개관을 목표로 한다. 다양한 전시 및 교육 공간으로 조성되며 전남도는 사계절 내내 온 가족이 찾을 수 있는 다양한 체험시설에도 역점을 뒀다.

기록에 있는 의병과 함께 나라를 구하기 위해 헌신했던 이름 없는 의병을 조명하는 작업은 역사 바로세우기 차원에서 매우 의미깊다. 알려지지 않은 숨은 의인을 찾아내고 송고한 뜻을 널리 알리는 중차대한 과업이다. 산재한 유적지와 유물, 문중을 통해 자료를 확보하는 등 선양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하겠다. 박물관은 미래세대에 감동과 휴식을 선물하는 차별화된 콘텐츠로 만들어야 한다. 다시 찾고 싶은 최고의 명소가 되도록 마리를 맞대야 한다.

평범한 백성들이 국난 극복에 앞장섰다. 의병의 구국충혼을 되새기고 정신 계승을 위한 일이다. 지역민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할 전망이다. 전남의 블루투어 자원으로 크게 활용될 남도의병 선양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학교폭력은 큰 범죄다

남성숙 칼럼



본사 부회장

얼마전에 정순신 장관 내정자가 아들 학교폭력 문제로 낙마했다. 연달아 고위관료들이 자녀의 학교폭력으로 신뢰성에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최근에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 특보의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설이 나오자 그의 자녀가 학교 폭력의 최고 가해자였다는 뉴스가 쏟아지고 있다. 정순신과 비교도 안 될 수준의 심각한 학교폭력이었다. 당시 학교폭력위원회는 열리지도 않았고 가해자는 전학 후에 유유히 명문대에 진학했다고 한다.

학교폭력은 피해자의 인생을 망치는 큰 범죄다. 지난달엔 충남 천안에서 고교 3학년 김상연(18)군이 학교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김군은 유서에서 오랜 기간 복잡·외모 비하, 욕설, 다른 지역에서 왔다는 이유 등의 놀림을 당했다고 밝혔다.

최근 초중고등학교의 학교폭력 문제가 논란이 됐는데 대학교 예외가 아니다. 대학생 10명 가운데 3명이 학교폭력을 목격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학술지 '한국청소년연구'에 게재된 '대학생의 학교폭력 실태조사와 개선을 위한 예방대책 방안 연구' 논문을 보면 전국 4년제 대학생 10명 중 3명가량은 대학에서 학교폭력을 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28.9%가 대학에서 학교폭력을 목격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폭력의 종류는 언어폭력

이 68.9%로 가장 많았으며 성추행·성폭력(32.6%), 신체 폭력(17.0%)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강제 심부름(16.3%), 집단따돌림과 사이버폭력(11.9%)도 있었다. 학교폭력을 목격한 학생 10명 중 6-7명(66.3%)은 이후 경찰이나 학교에 신고하지 않았다. 신고한 경우(27.9%)보다 약 2.3배 많은 것으로, 그만큼 학교폭력을 목격한 후 방관하는 경우가 많았다.

초중고대학 뿐 아니라 청년들의 데이트폭력도 심각하다. 최근에는 데이트폭력으로 숨지는 사례도 나왔다.

폭력은 모든 이들에게 잊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 더 늦기 전에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

본보는 최근 광주시교육청 광주시동부교육지원청과 함께 '학교폭력 예방 내실화를 위한 광주교육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학교폭력의 대안과 예방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이 제안됐다. 이 토론회는 장난 문화 속 학교폭력 변화에 따른 학교와 교육공동체의 역할과 과제를 짚어보는 자리로 민·관·학계 전문가뿐만 아니라 학교 현장의 전담교사와 학부모가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전문가들은 '사이버공간 속 학교 예방을 위해서는 청소년의 디지털 안전, 디지털 권리 중심으로 디지털 민주시민 교육을 해야 하며 온 가족이 참여하는 스마트폰 원칙을 만들고, 지역사회에서는 청소년 디지털 권리장전 등 관련 조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감과 의사소통 등 역량이 중시되는 교육 과정을 통해 교사에 의해 주체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으며 학교 현장에서 학교폭력 업무와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는 인적·물적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그렇다. 학교폭력은 사회문제인 만큼,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프로그램 활성화가 무엇보다 뒷받침돼야 한다. 아울러 학부모의 예방교육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이 더욱 기대되며 사건에 개입해서 관계 회복에 개입을 해야 한다고 본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온 동네가 나서야 한다'고 하는 데 학교에 맡겨둘 게 아니라, 사회 전체가 나서 돕는 거버넌스가 마련돼야 한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학교폭력근절대책은 학교폭력으로 전학조치를 받은 가해자 학생부의 보존 기한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이를 대입 정시 전형에도 반영토록 하겠다는 게 골자다. 가해자 피해자 분리기간도 발생 즉시 '3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늘리는 것도 포함됐다. 그러나 이런 조치들로 학교폭력이 근절될지는 의문이다.

학교폭력 피해자는 크면서 가해자로 바뀌기도 한다. 학교폭력이 사회폭력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지역사회와 정부정책이 학교폭력 예방 노력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다. 학교가 진학성적에 쏟는 정성 만큼 학생들의 인성교육에도 정성을 쏟는다면 학교폭력이 줄 것이다.

학교현장에서는 학교폭력을 피해자 중심에서 바라보고 엄정한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학교폭력을 막을 최선의 방안은 학교당국이 정기적인 개인 면담을 통해 학생들의 행동·심리 변화를 관찰하고, 피해 학생이 발견되면 매뉴얼대로 즉시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교육당국과 지역사회 구성원이 미래세대의 건강함을 위해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

기고



황 일 봉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회장

“진정한 사죄”란 무엇일까?

사죄를 어떻게 해야 진정한 사죄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진정한 사죄”란 용어가 지역사회를 넘어 우리나라 전체의 관심사가 된 배경에는 올해 2월19일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사)대한민국 특전사동지회와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가 '포용과 화해와 감사' 대국민 공동 선언식을 진행한데서 비롯됐다.

이에 대해 진보단체, 민노총 등 시민사회 단체들은 “진정한 사죄”가 먼저라며, 공동선언을 폐기하라고 주장한데 이어 급기야 행사까지 방해했다.

그 이후에도 특전사동지회원들의 국립5·18민주묘지 참배까지 수차례 반대했었다.

필자가 생각하는 “진정한 사죄”란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를 청하고 참회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표하고, 이후에는 비슷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약속하고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사죄”의 전제조건은 반드시 가해자와 피해자가 만남을 통해 이뤄져야만 큰 효

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이다.

그 좋은 사례가 전두환씨 손자인 전우원씨의 사죄와 형식이다. 전우원씨가 미국에서도 사죄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피해자들이 실존하는 광주를 방문하고 80년 당시 피해자인 5·18 공법단체에 사죄하고 5·18민주영령들이 묻혀있는 국립5·18민주묘지에 직접 찾아가 예 참배했는가?

우리는 그를 믿어내지 않고 받아들이자. 이제는 대한민국 특전사동지회가 5·18민주화운동을 위해 소중한 목숨을 바친 고인들을 참배하러 5·18민주화공동묘지를 찾기도 했다.

시민단체들은 “사죄가 먼저”라고 주장하는데 피해자가 없는 사죄를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진정 묻고 싶다.

또 어디에서 어떠한 형식을 갖춰서 누구 앞에서 사죄를 하기를 원하는 것일까? 아님 기자회견을 통해서 사죄를 해야만 하는 것인가?

시민단체들이 요구한 진정한 사죄는 전두환·노태우씨가 직접 광주를 방문해 광주시민들에게 참회하고 용서를 비는 것이겠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한 일 아니냐.

필자도 그들이 사과하지 않고 죽은 것은 분하기 짝이 없다. 아쉽게나마 2020년 국정감사에서 제20대 특전사 사령관을 역임했던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이 80년 5월 광주에서 자행된 '군의 무자비한 진압과 살상'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를 했다는 점은 다소 위안이 되고 있다. 이를 계기로 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전압군으로 투입됐던 계엄군의 만행에 대해 특전사 선·후배들이 모인 (사)대한

민국 특전사동지회가 사죄를 하면서 찾아왔기 때문이다.

이에 5·18피해 당사자인 5·18공법단체는 이들의 사죄를 의미있게 받아들인 동시에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다시금 되새겨 주면서 5·18민주화운동의 위대성을 더욱 알리기 위해 주력하고자 한다.

아울러 5·18공법단체는 이들과 함께 피해자인 5·18유공자들을 이해하고 위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려고 한다.

진정으로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해 전국화·세계화하는 길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던 모습 즉, 피해자와 가해자들이 함께 광주의 민주화 역사를 알리고 그 위대함을 보여주는 결정적 결심인 대중정신으로 함께하는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사죄'와 '진정한 대중정신'이 이뤄진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제는 살아남은 피해자들이 불필요한 논쟁을 중지하고 진정한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승화시키는데 온 힘을 모아야 한다. 또한 지역민들과 함께 광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광주에서 시작된 역사와 대중정신을 효과적으로 전달해 5·18민주화정신을 전 세계에 전파할 수 있도록 전력을 할 때이다.

끝으로 광주시민들이 주먹밥을 먹으며 이뤄낸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와 가치를 알리는 K민주화정신 콘텐트를 정립하고, K민주화 교육, 문화, 치유의 프로그램을 개발해 민주화 성지라는 지지와 국민적 공감대를 국내·외에서 얻을 수 있도록 모두 노력해야 한다.

독자투고

강남 학원가 일대에서 발생한 '학생 대상 마약 음료 협박 사건' 이후 마약류 범죄가 생활 속으로 확산되면서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며 불안감은 더욱 고조되어 가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작년에 경찰에 검거된 마약 사범 1만2천387명 중 3천92명(25%)은 인터넷을 통해 마약을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다크웹이나 가상자산을 이용한 마약 사범은 지난해 1천97명으로 전체 89%를 차지한 것으로 마약사범 4명 중 1명은 인터넷을 통해 거래한 것으로 밝혀졌다.

SNS와 각종 만남 앱을 통한 비대면 거래를 이용하면 마약에 대한 접근이 쉬워지고

특히, 불법체류를 비롯한 외국인의 증가로 10-20대 젊은층과 외국인을 중심으로 마약류 범죄가 확산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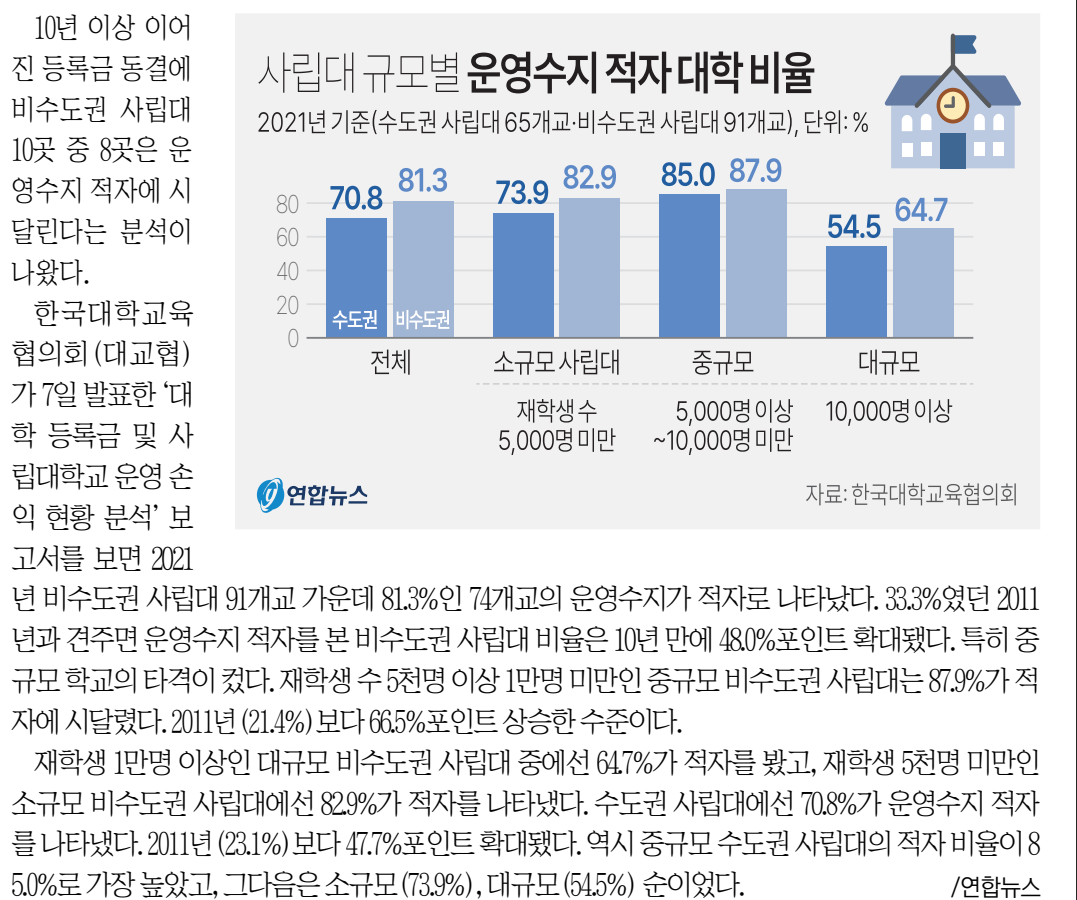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마약을 지칭하는 언어를 검색하면 판매 경로를 안내하는 글이 쏟아지고 다크웹과 텔레그램에서 쉽게 마약을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이를 전달하는 고액 아르바이트까지 등장하여 상호간 경쟁하는 경향도 보이고 있다.

호기심으로 시작한 마약의 유혹에 빠지면 스스로 절대 빠져나올 수 없다. 중독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삶이 불가능해지고 약물 구매를 위해 2차, 3차 범행을 자행하게 되는 무서운 존재인 마약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모두 주위를 한번 더 둘러보고 112 또는 어플(스마트 국민제보)을 통한 적극적인 신고가 동반돼야 할 것이다.

경찰은 상반기(3월1일~7월31일)·하반기(8월1일~11월30일) 집중단속기간을 정해 국가와 민간단체 합동으로 강력한 단속과 예방활동을 펼치고 있다. (신원우·화순경찰서 수사과)

그래픽 뉴스

비수도권 사립대 81% 운영수지 적자...수도권 71%도 '마이너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p>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p> <p>(우)0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p>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정치부	650-2030	사 진 부	650-2080	광 고 국	650-2072	광고국	650-2016
경제부	650-2050	논 설 실	650-2006	경 영 지 원 국	650-2010	편집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T V 본 부	650-2009	기 획 사업 국	650-2079	입부국	650-2019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 무 국	650-2020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10(1)제1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